

GLOBAL ISSUE BRIEF

2026년 5월호
vol.34

[외교·안보]



부문별 동향과 전망

‘유라시아 헌장’ 협의 추진 과정과 정책 시사점

박 정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jounhopark@kiep.go.kr

2026년 2월 3일 유라시아 5개국(러시아·벨라루스·이란·북한·미얀마)은 ‘21세기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Eurasian Charter of Diversity and Multipolarity in the 21st Century)’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2023년 10월 민스크 국제회의에서 벨라루스가 유라시아 헌장 개발을 최초로 제안한 이래, 라·벨 공동비전 서명(2024), 제네바 UN 사무소·베이징 SCO 사무국 브리핑(2025), 5개국 공동성명(2026) 등 단계적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헌장은 본질적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와 서방 주도의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를 대체하고, 유라시아 대륙 차원의 새로운 다극적 지역·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거대한 지정학적 설계도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적 계산과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유라시아 헌장 협의를 주도 및 참여하고 있다. 유라시아 헌장과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진영 대결 구도의 제도화, 역내 군비경쟁 심화, 핵 비확산 체제 약화 가능성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라시아 헌장’ 협의 추진 과정과 정책 시사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jounghopark@kiep.go.kr

1. 유라시아 헌장의 추진 경과와 배경

2026년 2월 3일 러시아·벨라루스·이란·북한·미얀마 등 유라시아 5개국은 ‘21세기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Eurasian Charter of Diversity and Multipolarity in the 21st Century)’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의 절차(inclusive consultative process)를 공식 개시하였다.

유라시아 헌장은 단계적 추진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발전해왔으며, 2026년 2월 3일 러·벨 외무부 동시 회의를 통한 5개국 공동성명 발표 및 협의 절차 공식 개시 등으로 이어졌다.

2026년 2월 3일 러시아·벨라루스·이란·북한·미얀마 등 유라시아 5개국은 ‘21세기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Eurasian Charter of Diversity and Multipolarity in the 21st Century)’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의의 절차(inclusive consultative process)를 공식 개시하였다. 이는 2023년 이래 러시아와 벨라루스 주도로 추진해 온 유라시아 헌장 발전 과정의 중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유라시아 헌장은 단계적 추진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발전해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 10월 제1차 민스크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서 벨라루스가 유라시아 헌장 개발 최초 제안, △2024년 11월 브레스트(Brest) 러시아-벨라루스 외무장관 회의에서 21개항의 ‘유라시아 헌장 공동비전(Common Vision)’ 문서 서명, △2025년 2월 제네바 UN 사무소와 베이징 상하이협력기구(SCO) 사무국에서 러·벨 공동 브리핑, △2025년 6월 모스크바 러·벨 외무장관 회담에서 유라시아 국가 외무장관에 대한 공동서한(Joint Address) 채택, △2025년 10월 제3차 민스크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서 헌장 관련 패널 토론 진행, △2026년 2월 3일 러·벨 외무부 동시 회의를 통한 5개국 공동성명 발표 및 협의 절차 공식 개시 등으로 이어졌다.

그림 1 제네바에서 유라시아 헌장 발표



출처: https://www.belarus.by/en/government/events/belarus-russia-present-eurasian-charter-of-diversity-and-multipolarity-in-geneva_i_208729.html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주도한 유라시아 헌장 추진의 배경으로 ‘유럽-대서양’ 안보체제에 대한 구조적 불신, 미국 및 서방 주도의 유라시아 전략에 대한 정면 도전 의도, 세계화의 퇴조와 지역주의의 부상을 들 수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주도한 유라시아 헌장 추진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유럽-대서양’ 안보체제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냉전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신뢰 구축과 핵전쟁 위험 감소에 기여한 긍정적 모델이었으나, 탈냉전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전환된 이후 서방의 일방적 정치 도구로 변질됨으로써 ‘안보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of security)’ 원칙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막심 리젠코프(Maxim Ryzhenkov) 벨라루스 외무장관은 OSCE가 “서방 참여국들에 의해 납치(hijacked)되어 NATO 동진 확대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였으며,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2022년 이전의 유럽-대서양 안보 체계가 “서방에 의해 완전히 신뢰를 잃고 해체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드미트리 류빈스키(Dmitry Lyubinsky) 러시아 외무차관은 2026년 2월 제네바 합동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분쟁이 유럽-대서양 안보 모델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붕괴를 초래했다”고 단언하면서, 유라시아 헌장이 새로운 지속가능한 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미국 및 서방 주도의 유라시아 전략에 대한 정면 도전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탈냉전기 미국이 NATO의 동방 확대 정책, 색깔혁명(Color Revolution) 배후 지원, 서구식 민주주의 이식 작업 등을 통해 유라시아를 미국과 서방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개입 및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발칸·이라크·아프가니스탄·우크라이나에서 파괴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셋째, 세계화의 퇴조와 지역주의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변동을 고려한 것이다. 라벨 공동비전 문서는 “서방의 일방적 경제제재가 글로벌 경제질서를 무기화했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달러 중심 국제결제 체제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추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수십 년간 인류 공동선으로 칭송받던 달러가 지정학적 경쟁자를 처벌하는 무기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글로벌 패권 추구를 포기한다면 매우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
현장은 탈냉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서구
중심의 안보 아키텍처가
붕괴하고, 세계가
‘다극화(Multipolarity)’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환기를
주요한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유라시아 현장은 탈냉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서구 중심의 안보 아키텍처가 붕괴하고, 세계가 ‘다극화(Multipolarity)’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환기를 주요한 배경으로 삼고 있다.

2. 유라시아 현장의 전략적 지향점과 주요 특징

유라시아 현장의
핵심 원칙과 전략적
지향점은 4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의 근간으로서
‘다양성(Diversity)’과
‘다극성(Multipolarity)’,
‘안보의 불가분성
(Indivisibility of
Security)’과 수평적 안보망
구축, 서구 중심의 경제적
의존성 탈피와 금융 주권의
확보, 내정 간섭 배제와
진정한 유엔 중심주의의
복원이다.

유라시아 현장은 본질적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와 서방 주도의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를 대체하고, 유라시아 대륙 차원의 새로운 다극적 지역·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거대한 지정학적 설계도라고 볼 수 있다.

2024년 11월 브레스트에서 서명된 러·벨 ‘공동 비전’ 문서는 21개 조항을 통해 ‘현시대의 핵심 현실과 공동 약속(Key Realities of Our Time and Commitments)’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핵심 원칙과 전략적 지향점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계의 근간으로서 ‘다양성(Diversity)’과 ‘다극성(Multipolarity)’이다. 유라시아 현장은 각국의 문명, 문화, 전통뿐만 아니라 각국이 자율적으로 채택한 정치적 통치 형태와 사회경제적 발전 모델의 다양성을 세계의 본질적 근간으로 규정한다. 현재의 세계는 다양성의 결과인 다극 상태를 향해 불가역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과 진정한 다자주의를 통해 공정·포용적 민주적 세계 질서와 평화공존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안보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of Security)’과 수평적 안보망 구축이다. 유라시아 현장은 맹주를 앞세워 블록 규율을 강요하는 나토(NATO)와 같은 수직적이고 배타적인 군사 동맹을 명백히 거부한다. 그 대신에 특정 국가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안보의 불가분성 원칙을 새로운 아키텍처의 중심에 둔다. 이를 토대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되 제로섬 게임을 배제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안보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한다.

셋째, 서구 중심의 경제적 의존성 탈피와 금융 주권의 확보이다. 유라시아 현장은 군사적 안보가 경제적 자립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서방에 의해 무기한된 기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SCO 개발은행 등 독자적 금융 기구의 창설, 국가 통화 결제망의 확대, 그리고 ‘거대 유라시아 파트너십(GEP: Great Eurasian Partnership)’ 등과 같은 독자적인 물류 및 인프라 통합을 통해 외부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경제·금융적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삼는다.

이고르 세크레타(Igor Sekreta) 벨라루스
외무차관의 견해에 따르면,
유라시아 현장은 “UN
시스템과 병행하는 별도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UN
원칙을 이행하는 도구”다.

넷째, 내정 간섭 배제와 진정한 유엔 중심주의의 복원이다. 서방 주도의 색깔 혁명(민주주의 명분을 내세운 정권 교체 시도), 일방적 경제 제재 등 외교적 억압 도구를 내정 간섭이자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한다. 특정 세력이 강요하는 추상적인 규칙기반 질서 대신에 유엔 헌장에 명시된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이라는 정통적인 국제법으로 회귀할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UN 내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의 다수(World Majority)’의 목소리와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지향한다. 이고르 세크레타(Igor Sekreta) 벨라루스 외무차관은 2026년 2월 BelTA와의 언론 인터뷰에서 “UN 헌장은 국제관계의 최우선 법적 문서로 남을 것”이며, 유라시아 현장은 “UN 시스템과 병행하는 별도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UN 원칙을 이행하는 도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현장의 정당성 결여 비판을 미연에 차단하면서 비동맹·중립국가의 참여 문턱을 낮추려는 외교적 포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유라시아 현장 주도국(러시아)과 참여국(북한)의 전략적 의도

러시아가 유라시아 현장을
본격적으로 주도하는
전략적 의도와 이해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서의 레버리지 확보,
전후 유라시아 질서에 대한
선점 의도, BRICS와 SCO를
보완하는 새로운 (소)다자
메커니즘의 구축 등이다.

유라시아 안보 구상은 2024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통해 최초로 공식화되었다. 트럼프 2기 들어 러시아가 유라시아 현장을 본격적으로 주도하는 전략적 의도와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서의 레버리지 확보이다. 2026년 2월 유라시아 현장 협의 개시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반(反)서방 연대의 확장과 제도화를 통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결코 고립되지 않았다”는 대외 메시지를 서방에 발신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국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전후 유라시아 질서에 대한 선점 의도다. 유라시아 현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이후의 유라시아 안보 질서를 러시아 주도 및 참여로 설계하려는 “전후 안보 질서 구상”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NATO의 추가 동진을 구조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투사 및 확장할 수 있는 다자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BRICS와 SCO를 보완하는 새로운 (소)다자 메커니즘의 구축이다. 유라시아 현장은 안보 아키텍처 차원에서 기존 SCO와 CSTO(집단안보조약기구)를 보완할 수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과 세계 다른 지역 간 통합 구조를 확대함으로써 식량·에너지·환경 등 핵심 경제안보 사안 및 지속가능성 의제 해결 접근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시 협력 파트너의 다자적 합법화 추구 시도다. 유라시아 현장에 북한과 이란을 포함시킨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군사 무기와 탄약, 심지어 병력을 공급한 국가들과의 비대칭적 전시 협력관계를 보다 공식적, 합법적 다자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세계 다수(World Majority)’의 결집을 통한 사상적·정치적 대항 논리 마련이다. 서방이 주도하는 규칙기반 질서와 보편적 자유주의에 맞서, 러시아는 각국의 문명적, 정치적 발전 모델을 존중하는 다양성과 다극화를 새로운 국제법적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압박에 피로감을 느끼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결집하여, 러시아가 세계 질서 재편의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고도의 이념적, 정치적 포석이다.

북한의 유라시아 현장 참여의 전략적 의도와 이해관계는 러·북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의 다자적 확장, UN 제재 체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경제적 연계 모색 등이다.

북한 역시 전략적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라시아 현장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2기 북한의 유라시아 현장 참여의 전략적 의도와 이해관계는 다섯 가지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첫째, 러·북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의 다자적 확장이다. 북한은 2024년 6월 19일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유라시아 현장 참여는 이러한 양자 조약을 다자적 프레임워크로 확장하여 국제적 고립을 구조적으로 탈피하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24년 BRICS 행사(브릭스 플러스 스포츠 장관 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하였으며, 2025년 9월 베이징 열병식 계기 시진핑·푸틴과의 첫 다자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이어서 2025년 10월 최섉희 외무상의 민스크 방문 및 제3차 민스크 안보회의 참석, 2026년 3월 25~26일 루카셴코의 첫 방북 및 친선·협조 조약 체결 등 일련의 다자 외교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38노스(38 North) 분석가 레이첼 민영 리(Rachel Minyoung Lee)는 “북한의 유라시아 현장 참여는 자신을 글로벌

38노스(38 North) 분석가 레이첼 민영 리(Rachel Minyoung Lee)는 “북한의 유라시아 현장 참여는 자신을 글로벌 행위자로 인식하는 자의식의 반영이자, 그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행위자로 인식하는 자의식의 반영이자, 그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파병 이후 북한이 적극적인 다자 외교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한 바 있다.

둘째, UN 제재 체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이다. 유라시아 현장의 반(反)제재(anti-sanctions) 논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를 ‘불법적 일방 제재’로 프레임하는 데 활용될 공산이 있다.

셋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경제적 연계 모색이다. 북한은 향후 러시아·벨라루스가 주도하는 EAEU와의 경제적 연계를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란이 2023년 12월 EA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옵서버국이 된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러 군사 협력의 다자적 정당성 확보이다. 러시아의 무기 구매와 북한군 파병은 김정은 정권에 현금과 식량이라는 귀중한 대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라시아 현장은 이러한 양자 군사 협력에 다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 동맹체제에 대한 구조적 견제 행보다. 북·러 조약은 한·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억제하려는 경고일 수 있으며, 미국의 역내 안보협력 체계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나 다름없다. 만일 유라시아 현장이 다자 안보 프레임워크로 제도화된다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북·러·중 3각 연대의 구조적 대칭성이 형성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그림 2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UN 연설



출처: <https://gadebate.un.org/en/80/russian-federation>

유라시아 현장은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에 맞서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지정학적 거점이자, 북한에게는 외교·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장기 안보를 도모하는 생존 전략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결국 유라시아 현장은 러시아에게는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를 견제하고 세계 다수 국가를 포섭하여 글로벌 권력의 중심을 이동시키기 위한 지정학적 마스터 플랜이다. 한편 북한에게는 만성적인 외교적·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를 다자 무대로 확장시키며, 반서방 전선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여 정권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유라시아 현장의 영향과 전망 시나리오

유라시아 현장은 단극 체제가 약화되고 다중심적 세계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환기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지정학적 프로젝트로,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라시아 국제관계 측면에서 유라시아 현장의 영향은 반서방 연대의 제도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의 가속화,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타격이다.

먼저, 유라시아 국제관계 측면이다.

첫째, 반서방 연대의 제도화다. 유라시아 현장은 'BRINK(벨라루스·러시아·이란·북한)' 축의 협력을 '비공식적 편의 동맹(Coalition of Convenience)'에서 제도적 다자 프레임워크로 전환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가 EU가 지향하는 규칙기반 질서를 추가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유라시아 현장의 반서방 논리에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의 가속화다. 유라시아 현장의 반제재·탈달러 논리는 BRICS 내 비달러 결제 시스템 확대, EAEU 역할 강화 등과 맞물려서 향후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를 보다 가속화할 수 있다. 이란의 EAEU와 FTA 체결과 오픈버 가 입은 제재 대상국들의 대안적 경제 통합 경로를 열어주는 선례로써 작용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셋째,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타격이다. 북·러 군사 협력은 UN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북한의 핵무기 확대 및 고도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첨단 러시아 무기 및 위성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은 역내 안보를 더욱 위협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유라시아 현장이 이러한 군사 협력을 다자적으로 정당화한다면, 핵 비확산 체제의 구조적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질 수 있다.

동북아 국제관계 측면에서 유라시아 현장의 영향은 새로운 진영 대결 구도의 형성 가능성, 역내 군비경쟁의 심화 가능성, 중국의 간접·우회적 지원 여부다.

동북아 국제관계 측면에서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진영 대결 구도의 형성 가능성이다. 북한이 유라시아 현장에 공식 참여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 이래 일관되게 유지해 온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사실상 포기하고, 명시적으로 북한을 선호하는 '냉전형 한반도 정

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하나의 정책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역내 군비경쟁의 심화 가능성이다. 러·북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의 상호방위 조항과 유라시아 현장의 안보 협력 제도화는 역내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불안 증대시키고 동북아 군비경쟁 및 한반도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수 있다.

셋째, 중국의 간접·우회적 지원 여부다. 중국은 유라시아 현장에 공식 서명하지 않은 채 간접적, 우회적 지원(제3차 민스크 안보회의의 대표단 파견, SCO·BRICS를 통한 간접 지지, 2026년 4월 베이징 SCO 사무국에서의 러·벨 공동 브리핑 호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주도의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 아키텍처가 미국의 영향력을 유라시아 지역에서 감소시키는 더 균형 잡힌 권력 배분에 기여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라시아 현장의 전망은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유라시아 현장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단계적 제도화 시나리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완전한 휴전으로 이어질 경우, 유라시아 현장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반서방 연대의 공식 다자 프레임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북한·이란·미얀마는 핵심 참여국으로 잔류할 것이고, 이에 더해 중앙아시아·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확대된다면, 유라시아 현장은 안보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세크레타 차관이 공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9월 UN 총회 계기 공식 협상 출범, 2026년 말 1차 협상 라운드 진행, 2027년 가을 협상 종결 및 2027년 10~11월 민스크 정상회의 개최 등 관련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유라시아 현장은 정상회의 결정 단계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둘째, 선별적 확장 시나리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평화협정으로 종결되고 러시아와 서방이 제한적·단계적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경우, 유라시아 현장은 보다 온건한 형태로 진화할 수도 있다. 만일 인도, 튀르키예, 일부 중동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우에 반서방 색채가 희석되면서 경제협력 중심의 실용적 플랫폼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북한·이란은 핵심 참여국으로 잔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셋째, 추동력 상실 시나리오이다. 트럼프의 ‘거래적 양자주의’에 의해 미·러 관계가 예기치 않게 개선되거나, 중국이 러시아의 반서방 다자화에 거리를 두는 경우 유라시아 현장은 실질적 추진력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유라시아 현장은 단순한 선언적 문서로만 남게 되고, 러시아는 양자적 동반자 관계에 집중하게 될 공산이 크다.

5. 정책 시사점

유라시아 현장과 관련한
정책 시사점은 크게
3가지다.

유라시아 현장과 관련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전략적 위상 격상과 한반도 억지력의 구조적 변화다.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함의는 북한이 만성적인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다자 안보망의 핵심 행위자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동북아시아 내 진영 대립의 고착화와 전략적 자율성의 위기다. 유라시아 현장은 나토(NAT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확장과 배타적인 소다자주의 군사 블록(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역내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배격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정학적 분절화와 공급망 리스크 가중이다. 유라시아 현장은 군사적 안보를 넘어, 서방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무기화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경제 및 금융 생태계 구축을 필수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유라시아 현장은 21세기
새로운 지정학적 안보
아키텍처를 세우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이자,
트럼프 2기 강대국 정치의
귀환과 다극화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등장한
유라시아 다자 안보
이니셔티브다.

결론적으로 유라시아 현장은 21세기 새로운 지정학적 안보 아키텍처를 세우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이자, 트럼프 2기 강대국 정치의 귀환과 다극화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등장한 유라시아 다자 안보 이니셔티브다. 아울러 유라시아 현장을 매개로 한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행보는 반서방 연대의 형성 작업일 뿐 아니라 유라시아 안보·경제 질서의 구조적 변동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정호 외(2024). 「러시아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Ryzhenkov, M. V. (2025). "A Eurasian Charter of Diversity and Multipolarity in the 21st Century." Russia in Global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Belarus (2024). "Common Vision of a Eurasian Charter of Diversity and Multipolarity in the XXI Centur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Belarus (2026). "Joint Statement Towards a Eurasian Charter of Diversity and Multipolarity in the XXI Century."

BelTA (2026). "Belarus-Russia briefing on Eurasian Charter of Diversity held at SCO Secretariat in Beijing."

BelTA (2026). "Sekreta: Interest in Belarus' initiative for Eurasian Charter is growing globally."

<https://www.rev.com/transcripts/sergey-lavrov-speaks-to-u-n-general-assembly>

<https://eng.belta.by/politics/view/belarus-russia-present-eurasian-charter-of-diversity-and-multipolarity-in-geneva-177302-2026/>

<https://www.38north.org/2026/02/north-korea-takes-its-place-at-eurasian-charter-table/>